

94.10.18

“학교 급식 예산 2백억원 확보하라”

학부모·여성단체 내년예산 누락 반발 기자회견·서명운동

국회에 상정중인 95년 교육부 예산에서 국민학교 학교급식시설·설비 지원예산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단체와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95년 예산에 학교급식시설·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98년까지 전국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의 2백억원 지원 수준에 상당하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는 11월10일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한편, 교육부에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7일부터 ‘학교급식 실태와 학교급식 후원회의 운영현황 및 학교급식 찬조금 징수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들



학교급식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동결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중국민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다.

어갔다.

94년 4월1일 현재 학교급식이 실시되는 국민학교는 전국 5천9백개 가운데 38.2%인 2천2백52개 학교다. 수로 따져보면 전체 국민학생 4백9만9천3백58명 중 24%인 98만3천7백38명만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면 실시를 3년여 앞두고 아직 4분의1 정도의 국민학생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95

년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98년 전면실시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현행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 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적인 의무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했는데도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학부모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기자